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판례분석 및 정책제언

초록

- ◎ 본 연구는 위계질서가 강한 집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축적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미투 운동 이후 분야별 젠더폭력 양상 변화를 검토하고, 사건기록으로 파악하기 힘든 피해 회복 과정의 어려움을 규명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수행하는 계속 과제로 기획됨.
 -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 한계 등을 점검하여 분야별 젠더폭력 제로(ZERO)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 첫해인 2023년에는 학교 성폭력 분야를 다루며, 학교 성폭력의 다양한 사안 중에서도 미투 운동의 촉발이 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인 교사 가해, 학생 피해의 스쿨 미투 사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
 - 학교 성폭력 판례에 담긴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언어적 성희롱의 일상화,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이어지는 2차 피해, 스쿨미투 전후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의 수준의 상이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담당자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 및 해석의 결과 등 학교가 결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와 같은 학교 현실과는 달리 스쿨미투 이후 공론화된 사건 수가 줄어드는 양상은 스쿨미투로 문제제기한 사안의 처리 결과가 학교, 교사, 학생 어느 쪽에도 두터운 보호보다는 상처만 남는 결과로 문제제기에 한발 물러서게 하는 결과를 남긴 것의 반증으로 볼 수 있음.
- ◎ 연구결과를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성폭력 대응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와 재판 실무 및 해석에 대한 제언,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학교 성폭력 대응에서의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함.

배경 및 문제점

- 2018년 여러 분야에서 불길같이 치솟았던 미투(Me Too) 운동은 우리 사회에 강건하게 유지되어 온 젠더 규범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됨.
- 본 연구는 위계질서가 강한 집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축적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미투 운동 이후 분야별 젠더폭력 양상 변화를 검토하고, 사건기록으로 파악하기 힘든 피해 회복 과정의 어려움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이를 통해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 한계 등을 점검하여 분야별 젠더폭력 제로(ZERO)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년에 걸쳐 수행하는 계속과제로 기획됨.
- 다양한 분야 중 학교와 문화예술계에 주목한 이유는 이들 영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인적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라는 점임. 권력형 성범죄의 척결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5대 폭력의 한 유형이기도 함.
 - ▶ 또한 학교와 문화예술계는 구조적 특성상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기 어렵고 사건이 은폐되는 공통점을 가지며,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법적 구조보다 사회적 구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영역이기 때문임.
- 2023년 연구에서는 학교 성폭력 분야를 다루며, 학교 성폭력의 다양한 사안 중에서도 미투 운동의 촉발이 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인 교사 가해, 학생 피해의 스쿨미투 사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
 - ▶ 미투 운동으로 이끌어 낸 법과 제도의 변화를 개관하고, 판례분석을 통해 미투 운동 전후의 성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고, 실태조사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피해 실태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함.

분석대상 판결문의 수집 및 분석 결과

가. 형사사건의 수집 및 분석

- 추행·강간 사건 외 기타 성범죄 유형까지 포괄하기 위하여, ‘학교&교사&학생(청소년)&추행(강간/간음)’이라는 검색어와 ‘학교&교사&학생’과 ‘카메라’, ‘다중이용장소’, ‘성착취’, ‘통신매체’ 등의 검색어를 결합하여 분석대상 판결문을 취합함.
- 검색된 판결문 중 심급 모두 열람 제한이 없고, 1심 선고를 기준으로 분석대상 연도(2015년-2022년)에 해당하는 사건 중, 교사(가해)-학생(피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대상 판결에 포함하여 수집함.
- 분석대상 판결의 시기 및 연도별 사건 분포는 <표 1>과 같음.

<표 1> 분석대상 형사사건의 시기별 사건분포

(단위: 건, %)

시기 구분	선고 연도	1심	2심	3심	빈도(구성비)
미투 이전	2015	3(13.6)	14(63.6)	5(22.7)	22(8.1)
	2016	3(7.3)	29(70.7)	9(21.9)	41(15.1)
	2017	8(21.1)	22(57.9)	8(21.1)	38(14.0)
	소계	14(13.9)	65(64.4)	22(21.8)	101(37.3)
미투 전개	2018	8(15.7)	29(56.9)	14(27.5)	51(18.8)
	2019	10(16.9)	38(64.4)	11(18.6)	59(22.1)
	소계	18(16.4)	67(60.9)	25(22.7)	110(40.6)
미투 이후	2020	9(25.0)	24(66.7)	3(8.3)	36(13.2)
	2021	2(16.7)	9(75.0)	1(8.3)	12(4.4)
	2022	4(33.3)	7(58.3)	1(8.3)	12(4.4)
	소계	15(25.0)	40(66.7)	8(8.3)	60(22.1)
전 체		47(17.3)	172(63.5)	52(19.2)	271(100.0)

- 분석대상 형사 판결문은 1심 선고 기준 총 271건으로, 형사사건에서 유죄선고를 받으면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기에 2심, 3심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음. 미투 운동 전개 시기인 2019년까지는 전체 사건 수가 증가세를 보이지만, 2020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임.
- 분석대상 형사 판결문의 학교급별 사건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53.1%), 중학교(22.1%), 초등학교(21.4%) 순으로 분포함.
- 죄명, 선고형 등이 모두 피고인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271건의 판결문을 피고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1명인 경우가 260건으로 전체의 95.9%, 2명인 경우가 10건으로 3.7%, 7명인 경우가 1건으로 0.4%이며, 이를 종합하면 전체 피고인은 287명이 됨.
- 287명의 형사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법」상 성범죄 외 기타 범죄, 「형법」상 성범죄 순으로 나타남.
- 하나의 사건에 기록된 범죄사실 또한 하나부터 많게는 177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전체의 17.1%에 해당하는 49건이 단순 죄명에 범죄사실이 하나만 존재하는 단일범이고, 나머지는 단순 죄명일지라도 범죄사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범죄사실이 하나여도 복합죄명이 적용되어 상상적 경합이 존재하는 경우, 범죄사실이 여러 개에 죄명이 여러 개 적용된 경합범에 속함.
- 피고인 287명의 죄명¹⁾이 단일한 경우와 여러 죄명이 경합한 경우는 각각 189건(65.9%)과 98건(34.1%)임. 단일 죄명 중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으로 189명 중 83명(43.9%)임. 이들의 1심 선고형 분포는 집행유예(33.7%), 벌금형(25.3%), 실형(21.7%), 무죄(15.7%) 순임. 동일 죄명임에도 다양한 형량이 정해지는 영향 요인을 살펴봐야 함.
- 또한 피고인 287명의 항소 여부와 그 결과는 <표 2>와 같음.

1) 인정된 죄명을 기준으로 함

<표 2> 분석대상 형사사건의 피고인 항소 여부 및 결과

(단위 : 건, %)

구분	빈도	구성비
항소 없음(1심 종결)	49	17.1
항소 있음(항소심 제기)	238	82.9
항소기각	126	52.9
원심파기 형량 조정	84	35.3
원심파기 형량 유지	28	11.8
전체	287	100.0

- 287명 중 238명(82.9%)이 항소심을 진행함. 항소 결과는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투 전개 이전과 이후는 항소기각의 비율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항소기각의 비율이 줄고, 원심파기 비율이 늘어남. 이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며 법제도의 변화가 잦았던 시기 형량을 조절하거나 법률의 변화를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표 3> 분석대상 형사사건의 미투 시기별 항소 결과

(단위 : 건, %)

시기 구분	항소기각	원심파기 형량조정	원심파기 형량유지	전체
미투 이전	53(60.2)	29(33.0)	6(6.8)	88(100.0)
미투 전개	41(40.2)	42(41.2)	19(18.6)	102(100.0)
미투 이후	32(66.7)	13(27.1)	3(6.3)	48(100.0)
전체	126(52.9)	84(35.3)	28(11.8)	238(100.0)

- 형종의 변화를 포함하여 같은 형종 내 형량이 조정된 84건의 미투 시기별 변화는 미세하며, 항소심에서 형량 조정이 이뤄진 경우, 대체로 형량 감소의 비중이 79% 정도로 높게 나타남.

<표 4> 분석대상 형사사건의 미투 시기별 형량의 변화

(단위 : 건, %)

구분	시기			전체
	미투 이전	미투 전개	미투 이후	
형량 감소	23(79.3)	33(78.6)	10(76.9)	66(78.6)
형량 증가	6(20.7)	9(21.4)	3(23.1)	18(21.4)
전체	29(34.5)	42(50.0)	13(15.5)	84(100.0)

- 상고심은 전체(287명)의 18.5%에 해당하는 53명이 제기하였으나,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고 기각됨.
-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개인정보 식별 정보가 많은 부분 가려진 채 제공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상세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판결문의 기재로 파악이 가능한 사안의 대부분은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피해를 가한 사안임.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률이 적용됨. 사건에 따라 일관된 법조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였는지에 따라 죄명 및 형량이 달라짐.

- ▶ 법 해석·적용과 관련해서는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해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들이 많음.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 개념이 불명확하여 그 죄 성립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은 가벌성의 사각지대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러한 모호함에 관련된 사항 판단 시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등이 특히 작용하는데, 법관의 성별, 젠더 의식, 양성평등의식에 따라 범죄사실 인정 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큰 문제이므로, 타당하고 정형화된 기준 정립 및 법 개선과 함께 성폭력 재판에서 경험 법칙으로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성인지 관점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법원 내부의 교육과 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나. 행정사건의 수집 및 분석

-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사이트에서 행정사건을 선택한 후, 2015년~2022년 기간 동안 ‘교사&성폭력’ 검색 결과와 ‘교사&성희롱’ 사건의 검색결과를 취합 후 교사(가해)-학생(피해) 사건인지 판단하여 해당하는 건의 판결문 추적을 거쳐 120건의 판결문을 수집함.
- 행정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미투 이후의 사건이 50.0%를 차지하나, 이는 미투 전개 시기 징계받은 건이 그 이후 행정소송이나 소청위원회에서 다투어진 결과로 보임. 징계처분의 내용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95건(79.2%)이며,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7건(7.5%)을 차지함.

<표 5> 행정사건 분석대상 판결문의 미투 시기별 원처분 내용

(단위 : 건, %)

구분	미투 이전	미투 전개	미투 이후	전체
중징계(파면/해임/정직)	23(88.5)	29(85.3)	43(71.7)	95(79.2)
경징계(감봉/견책)	2(7.7)	2(5.9)	5(8.3)	9(7.5)
기타 처분	1(3.8)	3(8.8)	12(20.0)	16(13.3)
전체	26(100.0)	34(100.0)	60(100.0)	120(100.0)

※ 기타 처분에는 직위해제, 정보공개거부, 지명배제, 해고 등이 존재함.

- 행정사건 내 학교 분포는 고등학교가 73건(60.8%)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32건(26.7%), 초등학교 15건(12.5%) 순이나, 미투 전개 이후 고등학교의 비중은 줄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성비위 사안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
- 행정사건이 제기된 지역 분포는, 미투 이전 시기에는 경기권(64.8%)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미투 운동이 전개된 시기에는 경기권 외에도 서울과 경상권의 사건이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미투 전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분포를 보임. 이는 스쿨미투 운동의 전개와 궤를 같이함.
- 행정사건 분석대상 판결문에 드러난 교사의 신분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교원이 전체의 60.0%, 사립학교 교원이 35.8%, 기간제 교원이 4.2%를 차지함. 미투 이전의 사건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당사자인 사건이 80.8%였으나, 스쿨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이 당사자로 등장하는 사건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표 6> 행정사건 분석대상 판결문의 미투 시기별 교사 신분

(단위: 건, %)

구분		미투 이전	미투 전개	미투 이후	전체
교사 신분	국공립학교 교원	21(80.8)	20(58.8)	31(51.7)	72(60.0)
	사립학교 교원	5(19.2)	13(38.2)	25(41.7)	43(35.8)
	기간제 교원	0(0.0)	1(2.9)	4(6.7)	5(4.2)
	전체	26(100.0)	34(100.0)	60(100.0)	120(100.0)

- 행정사건 분석대상 판결문의 심급 분포를 살펴보면, 시기별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1심과 2심의 비중이 반반을 차지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룬 사건의 75.8%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2.5%의 사건을 인용함.
- 다만, 미투 시기에 따라 기각과 인용률에 차이를 보이는데, 미투 이전에는 기각률이 92.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미투 전개 시기를 거쳐 미투 이후 기각률이 66.7%까지 떨어지고 인용률이 31.7%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음.
- 또한 1심 법원의 결정이 대부분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나, 7건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힘. 4건이 기각에서 인용으로, 3건이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됨.

<표 7> 행정사건 분석대상 판결문의 미투 시기별·심급별 결과

(단위: 건, %)

구분		미투 이전	미투 전개	미투 이후	전체
1심 종결	기각	11(84.6)	14(82.4)	19(65.5)	44(74.6)
	인용	2(15.4)	2(11.8)	9(31.0)	13(22.0)
	각하	0(0.0)	1(5.9)	1(3.4)	2(3.4)
	소계	13(100.0)	17(100.0)	29(100.0)	59(100.0)
2심 종결	기각-기각	13(100.0)	12(70.6)	19(61.3)	44(72.1)
	기각-인용	0(0.0)	2(11.8)	2(6.5)	4(6.6)
	인용-기각	0(0.0)	1(5.9)	2(6.5)	3(4.9)
	인용-인용	0(0.0)	2(11.8)	8(25.8)	10(16.4)
	소계	13(100.0)	17(100.0)	31(100.0)	61(100.0)
전체		26(100.0)	34(100.0)	60(100.0)	120(100.0)

※ 각하/기각은 기각으로, 각하/인용은 인용으로 분석함.

- 분석 대상이 된 행정판례는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다투는 내용이 주됨. 행정판례 속에 드러난 성비위 행위의 유형은 형사판례에서 살펴봤던 「형법」 및 형사특별법 상의 성폭력 범죄 유형도 존재하지만, 「아동복지법」 상의 성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포함하여 단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행위까지 다소 폭넓게 존재함.
-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관련 행정판례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쟁점사항은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 기간제 교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의 쟁점이 된 사안, 징계처분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충족, 징계사유의 특정과 통지, 징계의 범위, 증명책임, 징계시효와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사안, 관련 형사사건과의 관계와 징계사유의 불특정 및 불명확 등을 문제삼으며 징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사안, 징계처분의 과다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다룬 사안 등임.

- 판례는 징계근거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징계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있음. 또한 징계처분의 과다 판단에서도 교원징계위원회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해당 징계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한 경우 징계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다만, 징계사유의 존부 다툼에서 징계사유의 불특정 및 불명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지점을 살펴볼 수 있음.
 - ▶ 통상적인 징계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발단이 되어 조사가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보강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징계사유가 구체화 된 다음에 최종적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나, 문제된 사안에서는 ‘학교 교사 전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를 모색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전수조사 방식의 무기명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비위 교사’로 지목된 바, 그 뒤 보강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사유가 부인된 경우로 증거확보 절차가 더욱 보강될 필요가 있음.

다. 민사사건의 수집 및 분석

-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사이트에서 민사사건을 선택한 후, 2015년~2022년 기간 동안 ‘교사&성폭력’ 검색 결과와 ‘교사&성희롱’ 사건의 검색결과를 취합 후 교사(가해)-학생(피해) 사건의 해당 유무 판단 후 해당된 건의 판결문 추적을 거쳐 26건의 판결문을 수집함.
 - ▶ 전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형사사건과 행정사건과 달리 민사로 다루어진 사건 수가 적은 가운데,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이후 시기 내 민사사건은 이전 시기 대비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보임.
 - ▶ 민사사건의 청구 유형을 보면, 전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11건(42.3%)으로 가장 많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가 8건(30.8%), 급여(임금) 청구가 3건(11.5%), 정정보도청구와 구상금 청구가 각각 2건으로 7.7%씩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투 이전 시기에는 손해배상과 급여(임금) 청구를 구하는 소송으로 단순했던 반면, 미투 전개 시점부터는 징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청구 유형이 증가한 가운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유형 외에도 정정보도청구, 구상금 청구 등 다양한 청구 유형이 등장함.

<표 8> 민사사건 분석대상 판결문의 시기별 청구 유형

(단위 : 건, %)

청구 유형	미투 이전	미투 전개	미투 이후	전체
손해배상	3(75.0)	2(50.0)	6(33.3)	11(42.3)
징계처분 무효확인/취소 청구	0(0.0)	1(25.0)	7(38.9)	8(30.8)
정정보도청구	0(0.0)	1(25.0)	1(5.6)	2(7.7)
급여(임금) 청구	1(25.0)	0(0.0)	2(11.1)	3(11.5)
구상금	0(0.0)	0(0.0)	2(11.1)	2(7.7)
전체	4(15.4)	4(15.4)	18(69.2)	26(100.0)

● 청구 주체별 사건 분포를 살펴보면, 교사가 주체인 경우가 전체의 53.8%를 차지하는데, 그중 학교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징계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유형이 존재함.

- ▶ 두 번째로는 피해 학생과 부모 측에서 교사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유형의 사건이 전체의 30.8%를 차지함.
- ▶ 많지는 않지만, 학교법인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한 유형이 2건 존재하며, 불법행위책임을 연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가해 교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해 부담한 요양보험급여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음.

●피해 학생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을 포함하는 경우 8건 전체가 인용되었으나, 교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3건 중 1건이 인용됨.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8건 중 3건이 인용되어 37.5%의 인용률을 보임.

- ▶ 이 청구 유형은 앞서 살펴본 행정소송으로도 다룰 수 있는 유형으로 행정소송에서의 인용률이 22.5%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으로 다룬 사건의 인용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급여(임금) 청구는 징계처분의 무효나 취소에 따른 결과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인용률이 높고, 정정보도청구 관련은 50.0%의 인용률을 보임. 구상금 청구는 관련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최종 인용까지 이르는데 많은 소송을 거쳐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00%의 인용률을 보임.

<표 9> 민사사건 분석대상 판결문의 청구 유형과 청구 주체별 결과

(단위 : 건, %)

청구 유형	청구 주체	인용 (일부 인용 포함)	기각 (각하 포함)	전체
손해배상	피해 학생 측	8(100.0)	0(0.0)	8(30.8)
	교사 측	1(33.3)	2(66.7)	3(11.5)
징계처분 무효확인/취소 청구	교사 측	3(37.5)	5(62.5)	8(30.8)
정정보도청구	학교법인	1(50.0)	1(50.0)	2(7.7)
급여(임금) 청구	교사 측	2(75.0)	1(25.0)	3(11.5)
구상금	기타 공공기관	2(100.0)	0(0.0)	2(7.7)
전체	17(65.4)	17(65.4)	9(34.6)	26(100.0)

●분석 대상이 된 민사판례는 앞서 살펴본 형사판례와 행정판례에서 드러난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행위가 가해 교사의 불법행위책임과 학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을 구성하는지 다툼 사안이 주를 이루며,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됨.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손해를 산정하는 일임. 학습권 및 사생활에 있어 그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 그 양상과 정도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손해, 피해를 어떻게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또한 그 방법과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 학교 성폭력 판례에 담긴 다양한 사례 분석과 피해자 및 조력자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언어적 성희롱의 일상화,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이어지는 2차 피해, 스쿨미투 전후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 수준의 상이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담당자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 및 해석의 결과 등 학교가 결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이와 같은 학교 현실과는 달리 스쿨 미투 이후 공론화된 사건 수가 줄어드는 양상은 스쿨 미투로 문제제기한 사안의 처리 결과가 학교, 교사, 학생 어느 쪽에도 두터운 보호보다는 상처만 남는 결과로 문제제기에 한발 물러서게 하는 결과를 남긴 것의 반증으로 볼 수 있음.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성폭력 대응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와 재판 실무 및 해석에 대한 제언,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학교 성폭력 대응에서의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함.
- ▶ 첫째, 학교 성폭력 대응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로는 개별 법령에 흩어진 행위 정비 및 통합,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의 처벌, '성적 수치심' 요건의 삭제, 피해자를 고려한 진술 절차 개선 및 간소화, 신뢰관계 동석 관련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사학법인 관리감독 현실화, 행정사건 처리 절차 및 관행의 개선,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함.
- ▶ 둘째, 학교 성폭력 관련 재판 실무 및 해석에 대한 제언으로는 교사-학생 간의 성관계 사안에서의 '동의'에 대한 아동 최우선 관점에서의 적극적 해석, 특별감경 양형인자의 신중한 적용, 비밀누설 금지의무 적용 범위의 확대,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제안함.
- ▶ 셋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관계자 교육 강화를 제안함.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와 함께 수사재판기관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의 강화도 요구됨.
- ▶ 마지막으로 학교 성폭력 대응에서의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적 해결 외 학교의 신뢰 회복 및 사안에 따른 적절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표 10> 학교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단위: 건, %)

대과제	소과제	실시 주체
학교 성폭력 대응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개별 법령에 흩어진 행위 정비 및 통합	법무부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의 처벌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적 수치심' 요건의 삭제	법무부, 보건복지부
	피해자를 고려한 진술 절차 개선 및 간소화	경찰, 검찰, 법원
	신뢰관계 동석 관련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법무부
	사학법인 관리·감독 현실화	교육(지원)청
	행정사건 처리 절차 및 관행의 개선	학교, 교육(지원)청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등 관계 법률 개정	법무부, 법원행정처
학교 성폭력 관련 재판 실무 및 해석에 대한 제언	교사-학생 간의 성관계 사안에서의 '동의'에 대한 해석	법원
	특별감경 양형인자의 신중한 적용	법원
	비밀누설 금지의무 적용 범위의 확대	법원
	배상명령의 활성화	법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관계자 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학교, 교육(지원)청
	수사재판기관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경찰, 검찰, 법원
학교 성폭력 대응에서의 신뢰 회복의 중요성	사법적 해결 외 학교의 신뢰 회복 및 사안에 따른 적절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학교, 교육(지원)청

주관부처 : 교육부 양성평등담당관실,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주관부처 : 교육부 양성평등담당관실,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